모로코 지진 사망자 2100명 넘어서…각국 지원 잇따라

골든타임 다가와 필사의 구조 작업…접근 어려워 사상자 늘어날 듯
잇단 여진에 집 못 들어가고 노숙…유네스코 문화유산 곳곳 파손 피해
세계 각국 구조대 파견 구조활동…유니세프 등 구호단체 성금 모금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규모 6.8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10일(현지시간) 마라케시 아미즈미즈 인근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2122명이 숨지고 242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규모 6.8의 강진이 덮치면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지진 발생 사흘째에도 규모 4.5의 여진이 관측되는가 하면,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면서 생존자 구조·수색 작업도 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존자들도 여진 가능성 등 2차 피해 우려로 고통받고 있다.

모로코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각) 오후 4시 기준으로 2122명이 숨지고 242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의 피해가 커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밤 11시 11분께 모로코 마라케시 서남쪽 약 71km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20여년간 이 주변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000~1만 명일 가능성이 35%로 가장 높다고 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면서 필사의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글로벌 운영 책임자인 캐롤라인 홀트는 성명에서 "앞으로 24~48시간이 생존자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지역의 험준한 산세와 취약한 도로 여건이 구조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여진도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휴일인 이날 오전 9시께 마라케시 서남쪽 83㎞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본진보다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는 여진을 우려하기도 한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과 일부 지반이 이미 지진에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진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으로, 여진이나 금이 간 건물의 추가 붕괴를 우려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에 나선 주민들도 많았다.

전통시장과 식당, 카페 등이 모여있는 마라케시 최고의 명소 제마 엘프나 광장은 이들의 피난처가 됐다.

모로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도 강진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다.

마라케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시가지 메디나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마라케시의 지붕'으로 불리는 쿠투비아 모스크의 첨탑(미나렛)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 도시의 건물과 벽은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까닭에 모로코에서는 전례가 드문 강력한 진동에 속수무책이었다.

진앙이 위치한 아틀라스산맥의 가장 중요한 유적 중 하나인 틴멜 모스크도 이번 지진으로 일부가 무너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모로코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을 받은 스페인이 군 긴급구조대(UME) 56명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모로코를 돕기 위한 발걸음도 일부 빨라지는 양상이다. 튀니지에서는 전날 구조팀 50여명이 모로코로 향했고, 카타르에서도 87명의 인력과 구조견 5마리가 현지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편다.

알제리도 모로코와 단교 이후 2년간 폐쇄했던 영공을 인도적 지원과 부상자 이송을 위한 항공편에 개방했다.

카타르에서도 87명의 인력과 구조견 5마리가 현지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편다. 영국도 같은 날 모로코에 수색 및 구조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소규모 재난 전문가 팀을 모로코에 파견했다.

정부 차원은 아니더라도 자체 봉사 인력이 나선 경우도 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봉사팀은 구조, 지원 및 수색 전문가 4명과 간호사 1명, 수색견과 그 조련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마라케시에서 약 50㎞ 떨어진 지진 피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선다.

이탈리아 민간 구조팀도 전날 밤 지진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지진으로 외부 접근이 막힌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각 단위의 모금 운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제단체인 유니세프와 유엔은 물론 각국의 구호단체들이 성금 모금에 나섰다. 프랑스의 경우 적십자사를 비롯해 최소 5개 단체가 구호 활동과 생필품 공급에 기여하겠다며 기부금을 걷고 있다.

프랑스의 한 민간 구조 단체는 모금 활동뿐 아니라 11일 모로코에 연대 사절단을 보내 현지 파트너와 필요한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긴급 물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日, '독도 영유권 홍보' 예산 편성

국제사회 정보 제공 활동 강화

일본 정부가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영유권을 두고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정보 발신은 국내외를 나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예컨대 국제법에 정통한 대학교수를 선정해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식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이곳은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영상을 2년 전부터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과 관련,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하게 자국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독도에 대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美 공화 대선 지지율 압도적 1위…러닝메이트 누가되나 관심

크리스티 놈 주지사 가세로 주목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는 공화당 잠룡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자 벌써부터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대선 출마시 부통령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경쟁에 불을 댕긴 사람은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다.

9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여러 미국 언론은 지난 8일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열린 공화당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설 무대를 만들어 주고, 공개 지지 선언을 한 놈 지사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 가세했다고 보도했다. 1971년생으로 올해 52세인 놈 주지사는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201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에 당선됐으며, 강경 보수 성향 인사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놈 지사 이외의 여성 정치인 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유엔 주재 대사를 역임한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된다. 다른 여성 인사 중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인 엘리스 스테파니크(뉴욕주)와 마저리 테일러 그린(조지아주)과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테네시주), 전직 TV 앵커 캐리 레이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기에 러닝메이트를 결정하는데 큰 관심이 없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美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3년만에 재판 시작

미국의 대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인 구글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올린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룬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